

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건의문

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

-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.
- 2021년 7월 1일, 대한민국 경찰 창설 76년만에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습니다.
- 국가경찰에 의한 ‘관리’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, 주민의 참여와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 내딛게 된 것은, 도입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.
-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,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가 전개되고,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‘왜 자치경찰제인가’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. 이른바 ‘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’인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해 ‘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는 자치경찰제’라는 비판이 있습니다.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명명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

- 무엇보다도,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이 모호합니다.
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. 자칫,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
- 또한,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사·조직 운영상의 제약이 있습니다.
- 아울러,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'23년 이후 전액 시·도 예산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운영하게 되면, 시·도 재정력 차이로 인한 치안품질 격차 발생이 우려됩니다.
- 이러한 제약과 우려를 극복하고, 자치경찰의 정체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「국가경찰-자치경찰 이원화」 모델을 도입함이 바람직합니다.
- 다만, 제도 도입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원화 모델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「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 실질화」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.
 - ❶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범위에 자치경찰사무를 명시하고,
 - ❷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실질화와
 - ❸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자치경찰제 운영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.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배분은 자치분권 2.0 시대에 지역치안의 효율성 극대화과 경찰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.

○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
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.

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학 배	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 용 환	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 철 영
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병 록	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봉	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 영 욱
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	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상 봉	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덕 섭
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 현 기	강 원 도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위원장 송 승 철	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 기 현
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 희 태	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규	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 만 형
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순 동	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용 구	

2022년 2월 10일

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

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**김 현 태**
경 상 남 도 자 치 경 찰 위 원 장